



제 307 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 1 차 도 시 교 통 위 원 회

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0. 21.

도 시 교 통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김상수 의원 등 8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수립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주민 또한 공익성에 대한 공감의 인식을 가지고, 실질적 주민참여가 가능한 도시계획 체계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

3. 주요내용

- 가.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주민참여 기회 제공, 주민의견 수렴 등을 신설(안 제2조제2항)
- 나. 주거지역의 주거시설 유입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3종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(안 제47조제1항제5호)
- 다.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 일원화(안 제60조제2항)
- 라. 조례 제2282호에 대한 부칙 경과조치 및 적용례 신설(<조례 제2282호, 2024.10.02.>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1
- 나. 예산조치 : 불임2
- 다. 관련부서 : 도시정책과
- 바. 입법예고 : 2024. 10. 10. ~ 2024. 10. 15. (5일간)
- 사.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,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 경과조치 등을 신설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-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 방향에 주민참여 기회 제공, 주민의견 수렴 등을 신설하여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명문화하고, 안 제47조제1항제5호에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70퍼센트 이하에서 30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주거지역의 주택공급 증가를 유도하였으며, 또한, 부칙 경과조치 및 적용례 신설하여 개정 이전 접수된 인·허가 사항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.
- 본 개정안은 원도심에 많이 분포된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일부 완화로 인한 도시 재생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.

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113조의2(회의록의 공개)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·장소·안건·내용·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13조의3(회의록의 공개)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,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. <개정 2012. 4. 10.>

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. <개정 2019. 8. 6.>

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“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”란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없음

-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기회 제공, 용도지역 내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수반 요인 없음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 첨부 사유

조례 개정 후에도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

4. 작성자

도시정책과장 이정주